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관련 기사 4, 6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5, 12면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7면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간혹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8면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9면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2, 12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여성 차별·
성 상품화의 결과

10, 11면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김양희 공무원노조 조합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쉴 틈이 없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지자체 행정직 공무원들까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출돼 휴일 없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방역과 선별진료소 지원, 확진자 관리 및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 업무, 집단생활시설 점검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집중 발생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공무원 노동자들도 많아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내가 일하는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없어서 대구나 경북지역만큼 [업무 증가] 심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동료 노동자들은 자신이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전주시와 성주군에서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짓눌리던 공무원들이 과로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호가 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포감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소는 감염병 관련 대응을 위한 상시·지속 업무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 총원

정부와 지자체는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총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가 잠잠해지면 일부 총원했던 인력도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곤 했다. 임시방편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일부 늘렸다가 사태가 가라앉으면 호지부지하

기를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 감염병 사태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주기적으로 벌어질 수 있고, 실제 벌어지고 있으니 그에 맞게 의료와 행정 환경을 바꿔야 한다. 또,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지금도 정부와 언론은 코로나19 확

진자와 감염 지역을 매일 알리며 위험성을 말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지속 인력을 대폭 총원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기간제 교사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연은정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사범대 학생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기본으로 적용받을 여러 복지 제도에서 제외됐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가 촛불운동으로 퇴진한 후,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각오로 2017년 4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1월 8일 2심 재판부(수원지법 민사합소1부 장재운 부장판사)도 경기도 교육청의 편을 들었다. 여전히 기간

제 교사는 죽어서도 차별받고 있다.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기간제 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김초원 선생님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원이라서 '노조 불허'라더니 복지 적용 땀 교원 아니라니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 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하게 했다. 수학여행을 갈 때 학생들이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도 들지 못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청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건 지금도 상식적이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제외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 김초원·이지혜(또 다른 기간제 희생 교사) 선생님이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크게 주목받았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인 것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자 모든 교육청은 2016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교사들에게 인정되는 복지 제도(맞춤형 복지 제도)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고 김초원 선생님에게 이 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명백한 법령해석이 없는 데다 교육감의 판단이 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조건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이 복지 제도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편을 든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결정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 교사노동조합에 구직자와 실직자가 포함됐으며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들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

조로 만들 때도 사용됐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하고,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 교육공무원이라서 안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모순인가?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을 견디고 과중한 업무도 묵묵히 떠맡으며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드라마 <블랙독>의 대사처럼 “아이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내쳤고, 기간제 교사를 계속 늘리고 있다. 기간제 교사 차별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잊었고 정규직화 약속도 내팽개쳤다. 그동안 많은 비정규직들이 죽었고 죽음 이후에도 차별받았다.

더는 이런 비극과 부조리가 반복돼선 안 된다. 대법원은 고 김초원 선생님 유가족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세월호 참사 희생 김초원 교사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탄원 서명
bit.ly/김초원탄원서명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국회 기자회견 참석했다고
징계 대상 돼야 하나

★ [서평] 《착취도시, 서울》
쪽방촌에서 고시원까지 ...
빈곤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김문성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온 비례 후보들은 이전 민주당의 투표를 거쳐 확정된 순서 그대로 11번부터 배치됐다. 물론 민주당이 1~10번 후보 선정·배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

요컨대,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투표로 뽑은 자당 후보들 앞에 새로운 후보를 추가 배치한 것이다. 기업인들과 개혁 성향의 친민주당 명망가들이 포진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전략 공천을 한 셈이다. 민주당 비례 후보들은 1~10번 명단 발표 전 소수 정당 "툰보잡"이 아니라 자신들이 비례 앞 순번이 돼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게 항의했다.

더불어시민당은 100명이 넘었던 1~10번 공천 신청자들에게 1인당 신청비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당은 민주당에게서 정치자금을 빌려도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를 허가했다. 당명과 로고, 공천 명단에 이어 돈 문제까지 민주당에 기생하는 위성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집토끼 산토끼 모두 잡으려 애쓰는 황교안의 분투

미래통합당에서도 영락없이 추태와 갈등이 벌어진다. 당 지도부가 서울 강남을, 부산 북·강서을은 공천을 번복해 황교안 측근 인사들을 공천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이 번복된 후보가 자살을 암시하며 잠적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후보 명단 제출일을 하루 앞둔 오늘(25일) 오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경북 경주시와 인천 연수를 공천 등을 무효화했다. 그 결과, 후보 경선에서 패한 후보가 공천됐다.

인천 연수을에선 친박계이자 술한 막말 파동으로 비난을 받아 온 지역구 현역 민경욱이 공천에서 배제됐다(컷오프) 다시 공천됐다가 또다시 번복됐다. 이제는 최종 결과가 오리무중이 됐다. 경주에서는 공천이 번복됐으나 애초 컷오프됐던 현역 김석기는 끝내 공천받지 못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친박계 인사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도 뒤집어졌다. 강성 우파를 전면 배치한 한선교와 공병호의 반란이 급세 진압됐다. 이 명단은 무효화되고 둘은 사퇴했다. 새로 확정된 명단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1번으로 올라섰다(이전 21번). 여권의 "한일전 총선" 프레임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친박 색채를 일부 덜었는데, 중도우파층

권인숙, 용혜인, 윤미향, 양이원영 등을 공천한 것은 민주당 위성정당이 정의당으로 갈 진보 표를 차단하는 데 크게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졸속 공천은 여러 추태를 낳았다. 3번으로 공천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후보로 선정되던 날, 연구원에 사표를 낸 걸로 알려졌다. 이는 선거출마 공직자의 사퇴 기한을 어긴 것이다.

녹색당이 철수해 비게 된 녹색 뒤에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당선권인 9번에 공천됐다. 그는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녹색당을 찍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지 이틀 만에 위성정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그는 후보 추천 후 민주당과 녹색당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또 다른 '비례민주당'인 열린민주당도 비례후보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열성 친문·친조국 성향의 고위 엘리트 인사들이다. 열성 친문의 기반이 어디인지, 이들이 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기득권 행태를 그토록 뻔뻔하게 변호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 공천의 패자부활전이라는 지적도 있다.

2번을 받은 최강욱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서를 발급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4번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수십억 원의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들롱사 사직하고 그 때문에 민주당 총선 공천에서도 탈락했었다. 8번을 받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손바야할 고위 검사 명단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판 검찰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셈이다.

을 크게 의식한 것이다.

이미 공표한 공천이 뒤집어진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석연도 25일 공천 취소에 반발했다. 결국 공관위는 민경욱 공천을 번복하고 최초 공천자인 유승민에게 민현주의 공천 승인을 최고위에 요구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홍준표와 김태호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우파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개혁보수·중도보수'로 보이려고 치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 승리를 위해 일단 우파가 단결하고 보자는 분위기도 강해, 반발은 선거 때까지 무마될 듯하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가소로운 자들"이라 비난하던 한선교는 며칠 뒤 "경술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며 꼬리를 내렸다. 공천 작업에 관여했던 김용태는 "국민에게 죽을 죄를 졌다"며 바짝 엎드렸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반우파 정서의 벽이 여전히 높고, 중도로의 확장에 대한 집토끼 우파의 반발이 있어서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조원진의 자유공화당, 전광훈의 기독교자유통일당도 공천 탈락자들을 일부 흡수하고 아스팔트 우파를 대변하겠다는 표 부스러기를 노리고 있다.



위선당당 위성정당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류 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초유의 위기 앞에서의 무기력을 은폐하려 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25일 회동)

주류 양당은 정의당의 선전이 노동자들을 고무할까 봐 경계한다

주류 양당의 비례 득표용 위성정당 설립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측의 폭력 사태까지 불사하며 통과시킨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강화하자고 한 이 개정 선거법은 다양한 진보적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출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목적은 통과 때부터 이미 미달이었다. 개정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단계에서 이미 불충분했고, 통과된 법안은 더 부실해졌다. 그럼에도 주류 정치에 대한 대중의 (모순적이지 만) 불만을 고려하면, 지역구에선 주류 양당간 진영논리가 강화(양극화)되더라도 정당비례 투표에서는 정의당 등이 약진할 가능성이 컸다. 문재인 정부의 배신과 위선이 공식 정치에 대한 반감과 무당파층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경제 위기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주류 양당이 집권당일 때 둘 다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한다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마땅한 대안이 없다. 기업들이 세계적 경제 위기 앞에서 겁에 질린 것은 당연하다. 주류 양당도 혼란에 빠져, 겁 먹은 기업주들의 압박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 운운하지만 주류 양당은 그에 걸맞은 지도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들에게엔 노동계 진보정당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

다. 총선에서 노동계 진보 정당이 선전하면 노동자들의 진보 개혁 열망과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저항할 자신감을 고무할 것이다. 진보 정당 중 유일하게 적잖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정의당의 선전을 본지가 응원하는 이유다. 이런 방침은 진보 염원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저항 행동을 건설하는 일을 더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진작부터 위성정당 꿈을 예고했는데도 그것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소수 정당들을 동원해 순식간에 이뤄진 걸 보면,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준비해 온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위성정당 계획에 정의당이 포함되면, 진보 표를 민주당의 표로 보이게 하는 일종의 표 세탁을 거쳐서, 진보 정당을 실제로 민주당의 2중대처럼 다룰 수 있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정의당을 보고 투표했는데, 민주당 덕에 당선됐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 덕분에 주류 양당 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좌절된 것은 다행이다.

진보 표를 노린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아직은 촛불 염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임을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문재인 탄핵이 벌어진다는 협박은 대중을 불신하는 소심한 두려움일 뿐이다. 탄핵을 당해도 썩 만큼 큰 권력형 부패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라면 모를까.

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합류

를 거부하고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대의를 지킨 것은 잘한 일이다. 덕분에 많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투표할 선택지가 보전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빼면 유일하게 지역구 현역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춘홍 민중당 의원도 다행히 위성정당 합류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지지율이 낮게 나와 곤혹스러운 듯하다. 주류 양당 간의 진영 논리가 강해지면서 정의당이 다시 압박받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진보 염원 대중의 좀 더 경험있는 부분은 미래통합당은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불만이 있다. 이렇수록 정의당은 정부·여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일에 주춤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라는 전 세계적 위기에 이어 경제 공황이 임박한 듯한 상황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을 추구해 온 정의당에게는 큰 어려움일 것이다. 과감하고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당이 그런 대안을 내놓을 태세는 안 된 듯하다.

그럼에도 촛불의 효과가 남은 상황에서 격렬한 위기감이 대중 사이에서 빠르게 고조되면, 주류 양당에서 벗어난 대안을 추구하려는 정서가 고취돼 정의당(과 민중당)이 정치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창호중 의사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심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팬츠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헛된 것이다.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유행 패턴을 보면 아이들 사이에 감염이 확산되면 가족 내 감염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병상 수가 OECD 1위라는 보도가 많다. 1000명당 13개 정도로 일본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한국의 병상 수는 70만 3468개로, 2005년 37만 6364개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병상의 대부분은 요양병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크게 늘어 30만 2840개를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수치를 ‘급성기 병상’ 수라고 부르는데, 이 수치는 1000명당 7개 정도로, 1980년대 OECD 평균 수준이다.(그 사이에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병상 수가 줄어 지금은 1000명당 다섯 개 정도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중환자실 병상은 2500개가량 줄었다! 중환자실 설치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병원급 의료기

관들이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적자가 난다며 중환자실을 그냥 없애버렸다. 민간 병원들에 의료를 맡겨 둔 결과다. 현재 한국의 중환자실은 1만 개가 조금 넘는데, 병상 이용률은 90퍼센트 가까이 돼,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가 1000명만 넘겨도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다.

단지 앞날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3월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무상의료 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현재 대구의 상황을 이렇게 폭로했다.

“대구시장이 뭔가 안정돼 가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구에는 국가지정응급병실이 겨우 23개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노동자들은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장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확진자 19~20명을 봐야 합니다. 풍오춤도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숙련되지도 않는 국군간호학교 졸업생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견뎌 내라는 애갑니까?”

대구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짧고 사망감 있는 20대 의사들(공보의, 군의관 등)을 대거 투입해 집집마다 방문해 검사를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을 못 본 채하고 문재인 정부가 개학을 했다가는 걸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신도림역 퇴근길 여전히 확진자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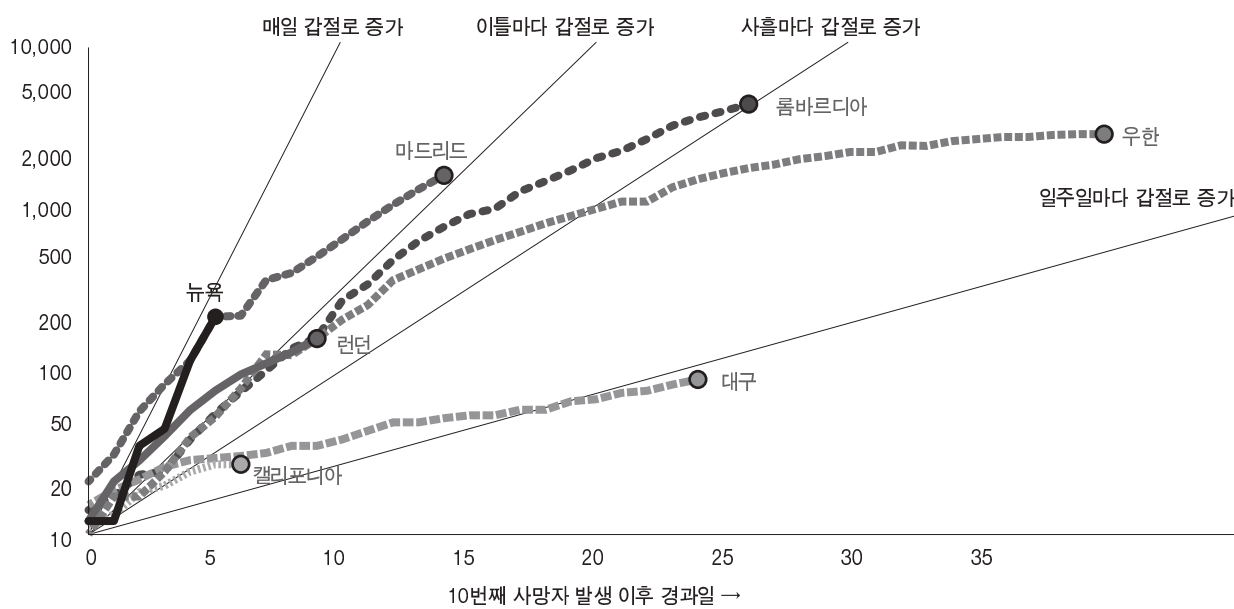


그림. 주요 도시의 사망자 증가 추이 뉴욕은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보다 사망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세계 지도자들의 대응은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치를 두고 전 세계 지배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유럽에 이어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 트럼프는 국경 안팎에 봉쇄령을 내려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격리시켰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확진자는 매일 1만 명씩 늘고 있고 조만간 이탈리아와 중국을 앞지를 것 같다.

트럼프가 신종 감염병의 위험을 무시한 대가를 미국 노동계급이 톡톡히 치르고 있다.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 추이는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을 기록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캘리포니아주는 진단 키트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지정한 의심환자만 검사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에 진단 키트를 지원해 달라고 한 이유다.

이대로라면 경제 불황이 1930년대 대불황을 방불케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트럼프는 하루빨리 “평상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자신이 명령한 격리 시한인 3월 30일 이후에는 격리를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수장으로서 기업주들의 이윤 창출이 중단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 창출은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존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트럼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꺼냈다가 곧 철회해야 했던 ‘집단 면역 획득’은 미국에서만 2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노인들이겠지만 그 노인들의 자녀인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규모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고(그런길 바란다), 소극적 저항(도파)만 만연해져도 생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노동계급 대중의 목숨을 두고 벌인 도박에서 자신도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지배자들의 고민도 트럼프의 딜레마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치료제

인류는 아직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어 보인다.

첫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플루엔자에는 치료제(타미플루)가 개발돼 있어서 인플루

엔자 유행 때문에 사회가 마비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걸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이즈 치료제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개발 중), 기생충 약 등을 써 보고 있지만 의사들 자신이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둘째,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백신이 있다면 불과 몇 달 안에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집단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변이가 빠른 바이러스라서 개발을 해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인데도 대기업들이 쉽게 뛰어들지 않는 까닭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당장 정부가 대규모 투자로 백신을 개발하고 공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금 남은 (인간적인) 유일한 대안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 때까지 우한, 대구, 롬바르디아, 뉴욕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 환자 수가 공공의료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

어서면 병실이 없어 대기하다가 병세가 악화돼 사망하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더 확산되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공장과 사무실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보리스 존슨의 계획이 머릿속 한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한계치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확진자의 증가 속도를 얼마나 늦추느냐는 것이다. 공공의료 시설이 제공하는 한계치가 얼마나냐 결정적일 것이다.

한 계산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공의료 시설의 한계 이내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면 앞으로 5000일 동안 환자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격리와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얼마나 오래갈지 어렵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미국 지배자들은 지위 약화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근린공법화와 무역 보호

정책 등으로 다른 경제들이 더 빨리 망하도록 하려 할 수도 있고, 국내 억압을 강화해 노동자들이 희생을 참고 버티도록 할 수도 있다. 심지어 제국주의적 전쟁도 옵션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중국 지배자들은 후자를 선택한 듯하다. 무려 4만여 명의 확진자를 통계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인데, 정부가 규정한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하지 않는 식으로 무시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그들[무증상 감염자는 감염력이 낮다]”고 답해 이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중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이 말로만 했고 트럼프가 할까 말까 망설인 그 방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신자유주의와 긴축으로 공공의료를 크게 약화시킨 나라들에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미 통제를 벗어난 나라들 —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 도 있고 아슬아슬한 나라들도 있다. 이들 모두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 투쟁의 끝에 이들 사이의 서열과 미래 경쟁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주요국 지배자들의 대응과 미래 선택이 아주 위험해 보이는 까닭이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정선영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은 -14퍼센트,뱅크오브아메리카는 -12퍼센트, 골드만삭스는 -24퍼센트를 예상했다.

다른 지역들은 더욱 심각하다. JP모건은 유로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22퍼센트, 영국은 -30퍼센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40.8퍼센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올림픽이 연기된 일본의 경제가 더욱 수축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물론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마비 상태가 끝나면 곧장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더라도 올해 경제가 수축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을 각각 -2.8퍼센트, -4.7퍼센트로 전망했다.

그러나 부실한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상당하다. 이미 이번 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세계적으로 기업 5곳 중 한 곳은 빌린 돈의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그 비율이 35퍼센트가 넘었다. 기업들은 수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값싼 이자로 겨우 연명해 왔던 것이다.

경제 위기의 충격은 신흥국 경제일수록 더욱 심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위



“기업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100조 원 투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재난기본소득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기가 벌어지자 신흥국에서는 급격하게 달러가 유출됐다. 게다가 신흥국은 선진국 정부·중앙은행에 비해 위기에 대처할 정책적 수단도 제한돼 있어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신흥국들에서는 2008년 이후 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파생상품

이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의 경제는 침체 상태이다. 레바논은 최근 외환위기를 겪고 있고,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인도에서 4번째로 큰 은행인 에스뱅크가 3월 초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인도 중앙은행이 구제에 나선 상태이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와 외환시장의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경제학자 장하준은 “IMF 때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근래에 금융권에서는 부실기업들의 고위험 회사채를 상대적으로 저위험인 금융상품들과 묶어서 파는 파생금융상품(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시장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와 부자들은 최근의 경제 부진 속에서 이런 고수익고위험 투자로 큰 수익을 누리 왔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의 방아쇠 구실을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꼭 닮았다. 기회였던 것이 위기의 블랙홀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기업 부실 사태가 은행과 나머지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뿐 아니라 기업 어음과 회사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정책들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긴급자금 100조 원 투입을 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주 50조

원의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번 주 100조 원으로 그 규모를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대기업에게로 확대했다.

100조 원 중 58조 원은 기업들에 대출·보증을 위해 공급되고, 나머지 42조 원은 회사채와 기업 어음, 주식 시장 부양을 위해 지원된다. 기업과 은행, 주식시장을 보호해서 얻는 효과는 투자자·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에는 50조 원이 들어간다고 외면하면서 기업들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정말이지 주류 경제학자들은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의 경제 이론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익은 소수 부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한다. 이익의 사

유화와 손실의 사회화야말로 자본주의의 정신이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손실은 노동계급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까지 이윤을 누리 오던 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위험과 임금 삭감 압박을 받고 있다.

세계노동기구(ILO)는 이번 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실업자가 최대 2500만 명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08년 위기 때의 2200만 명보다 많은 수이다. 불완전 고용과 임금 삭감도 증가해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은 3조 4000억 달러(42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위기는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저하해 온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고, 노동계급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고장 난 자본주의를 살린다는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계급의 삶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해고와 임금 삭감을 하려는 기업들을 규제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은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진보진영의 여러 단체들이 요구하듯 보편적 재난수당을 모두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당장의 생계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피해야 한다지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앞뒤 재지 않고 막대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 쓸 것이냐 아니냐는 진정한 쟁점이 아니다. 진정한 쟁점은 누구를 위해 쓸 것이냐다. 기업과 부자들이 부담해 노동계급을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3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개 노동개악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업주들이 요구해 온 온갖 노동개악들이 총망라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여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요구들은 더욱 가관이다.

경총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악하라고 주문했다.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기한도 현행 2년에서 대폭 연장해 비정규직을 쉽게 쓸 수 있게 하라고 했다. 탄력근로시간제도 등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 계약과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노동자를 더 쥐어짤 공리만 하는 소시오패스들

직무성과급제 도입, 최저임금 제도 개악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저항을 약화시킬 요구들도 포함됐다.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직장

폐쇄 요건을 완화하라는 것과 함께 사용자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을 완화하라고도 했다.

안전과 환경 규제도 완화하라고 했다.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산재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원청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개악하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학법)’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총의 요구는 박근혜 때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노동개악을 고스란히 꺼내 든 것이자 경제 공황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려는 포석이다. 경총은 코로나 위기로 노동운동이 행동

을 자제하고, 국민적 단합으로 코로나·경제 위기를 돌파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고봉전가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각해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살리기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인 “혁신 성장” 정책을 전면에서 부각했다.(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이래서 민주노총이 마침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했다.

총선 직후부터는 더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1997년

IMF 위기 때 노동운동이 김대중 정부를 믿고 사회적 대화에 참가했다가 파견법과 정리해고법에 합의해주는 실수를 저지른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자 보수를 삭감하며 공공부문을 거쳐 민간 부문으로 임금 삭감 공격을 확대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이미 3월 초에 4~6급 공무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이 제시한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총이 요구안을 발표한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친기업 경제 살리기 기조를 거듭 분명히 하고 경총이 선전포고를 한 만큼, 실질적인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 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적 계획에 기반한 사회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혁신을 복돋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국제사회주의강령(IS)의 성명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현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대다수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민주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장들의 체제는 혼돈이 지배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이나 정부는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기업들은 필요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수익성 논리에 기반한 시장을 통해 서로 관계맺는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서로 경쟁하는 수십 개 제약 회사들에 내맡겨져 있다. 자본주의 하에도 계획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그런 계획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보호하려는 소수에 의해 짜여진다.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3개국 출신 13만 명이 협력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위한, 즉 건설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슈퍼마켓들은 매장에 상품을 적시에 납품하기 위한 아주 상세하고 엄격한 계획을 세운다. 이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수요가 급증하는데 재고가 떨어졌을 때는 매우 나쁜 방식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2002~2003년에 대유행했다. 만약 당시 사스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던 사람들이 지난 18년 동안 연구를 계속했다면 지금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일로 옮겨졌다.

3월 18일에 이탈리아 기술 회사 두 곳이 3D 프린터로 인공호흡기 밸브를 제작했다. 이탈리아 치아라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밸브 물량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두 기업 중 하나인 이시노바는 인공호흡기 설계도 원본을 보유한 회사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자원과 필요를 일치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계획은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는 이윤이라는 장벽은 없을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생산할 수 있는지, 지금 무료로 분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임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



코로나19는 이 체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하는 것은 모두 강력한 민주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자본주의에서 이뤄진 발전으로 이런 일들이 쉬워졌다. 인터넷과 각종 대중매체가 발달한 덕에 우리는 활동을 더 쉽게 조정하고, 광범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를 조직하기에는 너무 멍청하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 국면을 봐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없었는데도 영국 전국 전역에서 상호 보조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2017년에 영국에서 서민 아파트 그랜벨타워 화재 참사가 벌어졌을 때도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구조 물자를 취합하고 분배를 조직했으며, 거처가 필요한 생존자들을 지원했고, 구호 활동을 조율했었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평범한 사람들은 필사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능력, 경험, 연대 의식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는 개별 참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 전체와 역사 전반에 걸쳐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신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체제에 도전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1917년 러시아, 1979년 이란,

2011년 이집트 등의 사례는 혁명적 운동들로 지배자들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모든 혁명적 운동에서는 사회를 새롭게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871년 파리코뮌에서 기계공과 금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평들이 “노동자들의 결속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해방”이며,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처지를 임금 생활자에서 [함께 사회를 운영하는] 동료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뮌은 최저임금제와 가격상한제를 제정했고, 새로운 형태의 의사 결정 방식과 사법제도를 실행했다.

혁명이 카를 마르크스는 파리코뮌을 관찰하며 미래 사회의 조직이 옛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와중에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는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우편통신노동자(CWU)는 [민영화된 최대 공공우편 기업] 로열메일 소속 노동자들이 ‘추가 긴급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의료 자원, 자가

격리 점점, 푸드뱅크 보급품 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로열메일이 추가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 당국과 조율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을 언제 배송할지를 주로 우체국장과 배달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가 결정한다.

기획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지배 노동자들이 상업적 우편물 배송을 일체 중단하고 필수품과 건강 정보 배송에 집중할 것을 결정하라고 요구할 기회가 생겼다.

이는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때만 가능하다. 민주적 계획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변화될 수 있다.

우선, 체제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낭비와 경쟁을 없앨 것이다. 무기처럼 사회에 쓸모없는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보건의로 서비스는 노동계급 전체 의견을 모아 계획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적 계획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양질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감지 안전한 병원에 감지 여부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회주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회 최상층에 올라앉아 평범한 다수 대중

을 착취하는 사회를 끝장낼 것이다.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반면 은행가나 시장들은 물건들, 주택, 요트를 사재기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이런 경제적·정치적 통제력을 가질 때 자원의 생산·분배에 관해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산·분배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의사 결정을 내릴 대표자를 작업 이런 수치들은 미국 상황을 예측할 것이지만, 영국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는 1929년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공황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재빨리 지적했듯이, 기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족해진 것은 세계경제가 이미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지

고이고 이런 체제가 지속되면, 사회주의 사회와 주요 계획 수립 모두가 국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 더 큰 규모로 계획하는 데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 첫째, 여권도 없고 국경도 무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보건의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 계획으로] 예컨대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규모로 보급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근시안적 경쟁과 이윤 추구 체제에서 개별 국가는 이런 행동들

▶ **7번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가능하고 싶다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표정을 보라. 발길 한복판, 다가오는 전도종 불빛 앞에 얼어붙어 있는 겁에 질리고 만신창이가 된 토끼를 점점 달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짜 겁에 질린 토끼는 우리였다. 존슨과 그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집단 면역”을 기르겠다며 수많은 사망자를 낳을 대규모 살해를 벌이며 해 평범한 영국인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는 존슨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수정해야 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국가의 구실에 관한 존슨의 사건이 중요한 변수였다.”

뒤집어 말해, 조업 중단과 봉쇄를 피하는 기존 결정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예상 사망자 수가 날을 정치적 후파도 존슨이 대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했던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경기 후퇴 규모도 한 요인이었다.

투자 은행 모건 스탠더는 미국 국민 총생산(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 올해 2사분기에 30퍼센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슷하게 전망한다. 경제사회자 애덤 투즈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세계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이 전에 없는 수준의 붕괴를 예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판도가 바뀔다!”

의사 결정을 내릴 대표자를 작업 이런 수치들은 미국 상황을 예측할 것이지만, 영국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는 1929년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 공황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재빨리 지적했듯이, 기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족해진 것은 세계경제가 이미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지

고이고 이런 체제가 지속되면, 사회주의 사회와 주요 계획 수립 모두가 국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 더 큰 규모로 계획하는 데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 첫째, 여권도 없고 국경도 무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보건의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 계획으로] 예컨대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규모로 보급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근시안적 경쟁과 이윤 추구 체제에서 개별 국가는 이런 행동들

▶ **7번에서 이어짐**

무억 경쟁은 더욱 격화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치명적 압박을 강화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억제할 능력을 제약했다.

기후 재앙도 국제적·합리적 계획으로만 막을 수 있다.



각국 정부들은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설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난 10년 동안 세계경제는 중앙은행이 값싼 신용을 퍼준 덕에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기업 부채가 대폭 늘어났다. 이제는 부채 위기 공포가 많은 사망자를 낳을 대규모 살해를 벌여 해 평범한 영국인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는 존슨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수정해야 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국가의 구실에 관한 존슨의 사건이 중요한 변수였다.”

은행과 기업들은 서로 자금 거래를 중단하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 2007~2008년 위기 때처럼, 세계 금융 시스템의 연료인 달러의 씨가 말랐다. 투자자들이 달러를 확보하려고 필사적으로 자산을 팔아치우면서 모든 금융 자산이 하락세다.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묘사한 금융 패닉의 고전적 양상이다.

경기 추축

팬데믹을 끝내려면 조업 중단과 봉쇄를 단행해야 하는 현재 상황은 이런 추축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조치는 경제를 상당 부분 멈춰 세울 것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임금·이윤·지대의 형태로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재화·서비스의 생산이라는 데에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허겁지겁 추진하는 조치로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현재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가능한 한 낮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채권·어음 등의 금융자산을 매입하고 있다.

이는 모두 2008~2009년에 취한 조치들의 재탕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조업 중단과 봉쇄를 단행하고, 어느 부문을 멈추고 재개하고 재편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 **6번에서 이어짐**

무억 경쟁은 더욱 격화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치명적 압박을 강화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억제할 능력을 제약했다.

기후 재앙도 국제적·합리적 계획으로만 막을 수 있다.

국가가 경제를 관리해야 의료 체제로 자원을 이전하고, 일손을 멈춰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도 있다.

영국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이런 방향으로 점점 압력을 받고 있다. 수낙은 열흘 동안 세 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지원책은 120억 파운드(약 17조 5000억 원), 두 번째 지원책은 200억 파운드(약 29조 원) 규모다.

3월 20일에 발표한 대책은 “휴직” 노동자 임금의 8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3개월 동안 100만 명당 35억 파운드(약 5조 원)가 들어갈 것이다.

다른 정부들도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 비용은 정부 차입을 늘리거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직접적 통화 공급”으로, 즉 직접 돈을 찍어서 충당할 것이다.

물론 이는 신자유주의 정설과 정면 배치된다. 그래서 존슨이 이 방향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유럽연합도 특유의 망설임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로 모순이다. 우파 경제학자 엠브로스 애반스-프리처드는 [텔레그래프]지에서 그 모순을 이렇게 요약한다. “존슨은 자유주의적 자유 시장을 구원하려면 사회주의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이윤보다 필요를 우선에 두기 시작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후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 까닭이 있을까?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2주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호 / 번역 김진호

▶ **6번에서 이어짐**

무억 경쟁은 더욱 격화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치명적 압박을 강화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억제할 능력을 제약했다.

기후 재앙도 국제적·합리적 계획으로만 막을 수 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진해 온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가난·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라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유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지역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잠탈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존엄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작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신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낼 수 못한다. 사회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국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라는 개혁할 수 없고, 해체하고 없애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 엠브로스 애반스-프리처드는 [텔레그래프]지에서 그 모순을 이렇게 요약한다. “존슨은 자유주의적 자유 시장을 구원하려면 사회주의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이윤보다 필요를 우선에 두기 시작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후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 까닭이 있을까?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2주지
(소셜리스트 위기) 269호 / 번역 김진호

▶ **6번에서 이어짐**

무억 경쟁은 더욱 격화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치명적 압박을 강화해 코로나19 팬데믹을 억제할 능력을 제약했다.

기후 재앙도 국제적·합리적 계획으로만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진해 온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가난·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라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유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자혁명을 반대하고 아주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기에 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아주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적·정치적 권력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각각의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에 있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고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력을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동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당장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괄됨으로써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의 장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성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의 함께 할다.

번역 오연희

※ 2019년 3월 30일 개정

부자는 구제하고 노동자는 공격하는 트럼프 정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고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나 3월 22일 이 예산안은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론 제제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면 대기업에게 돈을 공짜로 퍼줘야 한다는 데 민주·공화 양당 모두 뜻을 같이한다. 그 액수가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구제금융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데도 마찬가지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 발의됐다.

트럼프의 제안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약 3000달러(한화 약 370만 원)를 “현금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 돈은 4월 6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속절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이제껏 반발에 밀려 추진하지 못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등 트럼프가 오랫동안 주장한 정책들을 소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료들은 코로나19 유행을 끝내려면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명백히 지금 상황을 기회로 써먹고 있다.”

미국 공무원노조(AFGE) 위원장은 조합원 자격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이 “기층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저항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노동자들이 살랭이(비공인) 파업을 벌여 제너럴모터스,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공장에서 조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이 행동의 물결은 3월 18일 미 시건주(州) 스틸링하이츠시(市) 피아트·크라이슬러 조립 공장 야간조 노동자들에 의해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자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을 귀가시켰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노동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작업 라인에 연좌해 제품들이 조립되지 않은 채 벨트를 지나도록 내버려뒀다.

몇 시간 후 제퍼슨 조립 공장, 톨레도 조립 공장, 던디 엔진 공장에서도 살랭이 파업이 벌어져 생산이 마비됐다.

미국 자동차 기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사측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사항을 공지했지만 ‘아프면 쉬라’는 내용은 쏙 빼놓았다.

공장들은 “최소한” 3월 30일까지 폐쇄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폐쇄돼야 마땅하다.

희망은 미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투쟁하는 데에 있다. 기업주를 구제하고 노동자와 이주민을 공격하는 정부 법안에 저항해야 한다.

개비 소프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97호 / 번역 김준효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3월 24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3만 명으로 세계에서 다섯번 째로 많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 의료 체계를 모범인 양 치켜세운다. 그러나 독일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비용 절감을 앞세운 긴축 정책을 편 결과로, 인력 부족과 필요 의료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이 독일 튀링겐주에 있는 예나대학 병원 간호사인 한 노동조합 활동가를 익명으로 인터뷰해 현지 위기 상황을 생생히 알렸다. 이 간호사는 병원들이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자연대 학생회원 **김아라**가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해 소개한다.

“폭풍전야입니다.” 독일 예나대학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3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시간에 병원에 접수된 코로나19 감염자는 없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병원 사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거나 이 사태에 대한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코로나 의심 사례가 병원에서 발견됐을 때조차 코로나19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병원은 교통사고로 벌어질 응급 상황 대처법은 있지만 전염병이 날을 위에 어찌 대처해야 할지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노동자들은 병실과 물품, 인력이 부족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환자가 언제 밀려 들어올지는 예정돼 있지 않지만 때가 언제가 되든 혼돈 그 자체일 거예요.”

요.”

예나대학 병원에는 집중치료실이 네 곳 있다. 이 간호사가 일하는 집중치료실에는 침대 12개와 응급실이 갖춰져 있는데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응급실을 추가 병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모든 병상은 환자들로 차 있었다. 갑자기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급증하면 분명히 응급환자 수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추가로 발생할 환자를 돌볼 충분한 인력도 병상도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일하는 병동에는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집중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가 오더라도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지금 가능한 빨리 침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를

치료할 장비가 충분히 갖춰졌어도 기계를 작동하고 집중 치료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는데다가 지난해 독감이 유행했을 때 보호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만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노동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두렵게 만든다.

인력 부족

이미 그의 일터에서 보호마스크와 소독제가 많이 부족하다. 당장은 괜찮지만 며칠이나 몇 주 안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마스크는 매번 하나씩 사용

독일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마스크와 병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 출처: 백악관

그리스와 프랑스

코로나19 위험 높이는 유럽의 난민 혐오

에게해 군도(群島)에 있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소는 초만원 상태로 봉쇄돼 있다.

섬에 갇힌 난민 수만 명은 실내에만 있어야 한다.

일가족이 텐트나 개조된 선박 컨테이너 구석에서 지내야 한다.

3월 16일 레스보스섬의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한 명이 숨졌다.

현재 모리아 수용소에는 의사가 5명, 간호사가 7명뿐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난민은 2만 명이 넘는다.

수용소의 위생이 주된 걱정거리이다. 그리스 정부는 수용소의 청소 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리아 수용소의 한 소식통이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한 바에 따르면, 수용소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분뇨가 통행로로 쏟아지고 있다.

수용소 내 한 구역에서는 1300명이 수도꼭지 하나를 나눠 써야 한다. 〈소셜리스트 워커〉는 난민들이 수용소 출입구에서 물통을 배급받으려고 필사적인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다.

의료 구호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리스 정부가 난민들을 수용소에서 대피시키고 본토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리스 지부 소속 의학 전문가 힐다 보크텐은 이렇게 말했다. “난민들에 손 자주 씻기, 물리적 거리 두기 같은 권장 수칙들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북부의 구호 인력들에 따르면 점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난민들은 “불안에 떨고,

▶ 9면으로 이어짐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하지 마세요. 집에 머무르세요.” 독일도 물리적 거리 두기에 나섰다

하고 바로 버려야 하는데, 마스크가 부족해서 여러 번 재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감염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는 노조 동료들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할지를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실행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정치인들과 병원 경영진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보냈고, 병원 곳곳에서 청원 운동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데 기층의 사정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조합원 대표 중 두 명이 병원 위기관리 팀에 참여하게 됐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동안 위험수당과 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도 감염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과 추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걱정도 되고 화도 납니다.” 이 간호사는 다음 근무일을 앞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다. 정부가 그간 벌여 온 비용 절감과 긴축의 효과를 노동자·서민들이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불완전한 의료 시스템과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병든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병원 간 경쟁과 이윤 추구가 심해졌다. 그 결과 인력이 엄청 감축됐다. 인력 감축으

로 노동강도가 강화되자 간호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다. 지금의 위기는 지배자들이 뿌린 대로 거둔 셈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런 사태를 경고했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이런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원인은 잘못된 의료 체계에 있다. 지금의 위기가 보여 준 것은 이 체계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 8면에서 이어짐

잊혀져 방치된 상태”라고 느끼고 있다.

난민 약 800명이 프랑스 북부와 [영국과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 칼레에 있는 프랑스-영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영국인 자원봉사자 한 명은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전했다. “난민들의 건강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난민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면역 체계가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난민들은 시궁창 같은



불에 타 버린 레스보스섬의 난민 수용소

곳에서 살고 있고, 다수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란 출신 난민 카이라시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지원 단체가 계속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호와 지원이 끊기는 것은 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일 것입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97호 번역 강미령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한수진

시진핑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고 최근 우한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을 유지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최근 중국 내 신규 확진자들이 수십명 수준이고 그것도 해외 역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2월 내내 매일 수백에서 수천 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했다는 점은 사실인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 조작 논란이 존재한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4만 3000여 명이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나 폐 이상이 없으면 확진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무증상 감염이 극히 드물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장을 근거로 공식 통계에서 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확진자 다수가 무증상 환자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30만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한 한국에서도 전체 환자의 20퍼센트 정도가 퇴원할 때까지 무증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도 확진자 712명 중 333명이 무증상 감염자였다. 유럽연합(EU)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무증상 환자가 44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월 2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우한 통지의학원, 상하이 푸단대, 미국 하버드대 공동 연구팀이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포함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무증상 환자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계에서 제외해 놓고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었다고 의기양양해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시진핑 정부는 여전히 상존하는 위험성을 무시한 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려고 성급하게 승리를 선포한 듯하다.

고통 전가

시진핑 정부가 코로나19를 비교적 빨리 진정시킨 것은 강력한 통제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감염병 통제에서는 서방보다 중국이 더 우월하다는 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이다.

중국의 자본주의 발전, 공공 의료시설의 열악함,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 파괴, 도시 빈민시설에서의 과밀집 인구 등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등장한 배경이었다. 처음 코로나19가 등장했을 때 중국 정부는 발병 사실을 은폐해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 이 때문에 '시진핑 책임론'이 등장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매우 권위주의적인 중국 정부가 서방에서는 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를 한 것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을 지지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

더욱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통제는 이윤에 타격을 주는 방식보다는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었다. 1월 23일 우한 봉쇄령을 내렸지만, 우한시에 갇힌 사람들에게 생필품, 공공서비스, 적절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지병이 있는 노약자들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했고, 백혈병에 걸린 딸이 우한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 어머니가 애원하는 장면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다.

급조된 병상들, 의료 장비 부족 등으로 의료진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은 제대로 된 방역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사망했다.

우선순위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때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우한과 후베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대응도 상이했고, 중앙정부의 탁달과 지방정부의 성과 경쟁 때문에 제각각인 방안들을 도입하는 지역들이 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노력이나 하이테크 기술보다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의료진들의 희생정신 덕분이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급히 확산된 데에는 중국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발전에 매진하면서 공공 의료를 경시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감염병과 질병에 대비해 백신 개발이나 공공의료 및 공중 위생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

2017년 중국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2.0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 치료 병상 수는 3.6개로 이 또한 하위권이다. 도시에서는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3급 병원이 많이 있지만, 농촌에서는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이 취약한 기층 병원들만 있어,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대중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이윤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동자 대중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필자 한수진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으로, 중국에서 10대를 보낸 대학생이다.

Q 용어설명

3급 병원과 기층 병원

3급 병원은 전국의 성(省)·시(市) 직속 병원과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으로, 비교적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3급 병원도 감·을·병 세 종류로 나뉜다.

기층 병원은 보통 1급 병원과 그 이하 등급의 의료 기관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 도시의 보건소, 촌의 위생실 과 동네 병원을 말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최미진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했다. 이 영상을 각 단계별 비밀대화방에 돈을 받고 유통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이다.

아동·청소년들까지 “성 노예”로 삼은데다 수법이 잔인하고 가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나체 사진을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여성에게 줄 엄청난 공포심을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앞으로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가해자들은 성폭행을 사주해 그 영상을 찍어 올리는 짓도 저질렀다.

검거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에게까지 사기·협박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런 일련의 범죄가 24살 청년 홀로 저지른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미 올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처벌법’ 입법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관련 법을 논의하자고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정부 부처 할 것 없이 사태의 심각성과는 동떨어진 얘기나 했음이 정의당의 폭로로 드러났다. “자기만족을 위해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등.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반 포르노(야동)와는 달리, 사기와 협박으로 여성의 성을 갈취해 돈을 번 성 착취이다. 미성년자들을 노렸다는 점이 특히 악



연인원 수십만 명이 모인 불법촬영 항의시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 2018년 여름에 열린 불법촬영 항의 시위

랄하다. 이는 피해 여성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해,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여성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죄 수익도 전부 몰수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 특히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을 완벽히 삭제해 주고 그 비용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개혁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한편, 해당 텔레그램방 가입자 전원 처벌 요구도 들끓고 있다. 정의당의 법안에도 성 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입자 수치가 26만 명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그간 여러

종류의 방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중복 추산한 숫자인 듯하다. 이번에 드러난 ‘박사방’에는 약 1만 명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입자 중 성범죄를 적극 공모한 자들은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한다. 그저 일반 야동 사이트로 알고 미끼용 방에 무료 가입한 사람들과 달리, 강요와 협박에 의해 제작된 성 착취물임을 잘 알면서도 돈을 지불하고 영상물을 공유·유포한 유료 회원들은 성범죄의 방조자로서 일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공분이 일자.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전원 조사와 운영자 철저히 처벌 등을 주문했다.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2년 전 불법촬영 항의 운동에 참가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방지와 미온적 대처에 항의했던 여

성들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다. ‘예고된 비극이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했나?’

문재인 정부는 2년 전에도 불법촬영 범죄 엄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항의 운동이 잦아들자 지난해 초 국회에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함께 자행한 일이었다. 양진호의 검경 로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웹하드 카르텔과 정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지만, 뭐 하나 밝혀진 것도 처벌된 것도 없다.

무엇보다 그토록 수많은 여성들이 현 정부를 강력 성토했으며 항의한 근본 배경인 여성 차별의 현실이 그대로이다. 여성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수록 각종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 높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해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해 왔다. 코로나19 사태는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조국 사태로 날카롭게 드러난 계급 불평등과 현 정부 권력자들의 부패와 위선은 20대 청년 여성들에게도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겼다. 이것이 누적된 결과, 올해 초에는 20대 여성의 문재인 지지를 하락이 두드러졌다.

결국 그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번에도 총선을 앞두고 떨어진 표심 잡기용 검거 성과 과시와 반짝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버닝썬 사태 등에서 경찰은 여성 차별을 뿌리 뽑을 의지와 능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성범죄 고리의 부패한 일부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주류 상업 언론들은 앞다퉈 이 사태를 선정적으로 보도하지만, 이들도 여성을 욕보이고 성적 대상화하는 노골적인 광고들을 거리낌없이 실으며 수익을 창출해 왔다.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요구하는 기사들 주변에도 그런 광고들이 번쩍이며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악성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

지난 몇 년간 여성운동의 성과로 소라넷이 폐지되고 양진호 구속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커졌다. 그럼에도 수단만 바뀔 뿐 왜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을까?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시판의 발달, 익명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 개발 등이 이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었지만, 그것이 범죄의 원인은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 배경에는 이윤지상주의와 뿌리깊은 여성 차별, 성의 소외, 빈곤의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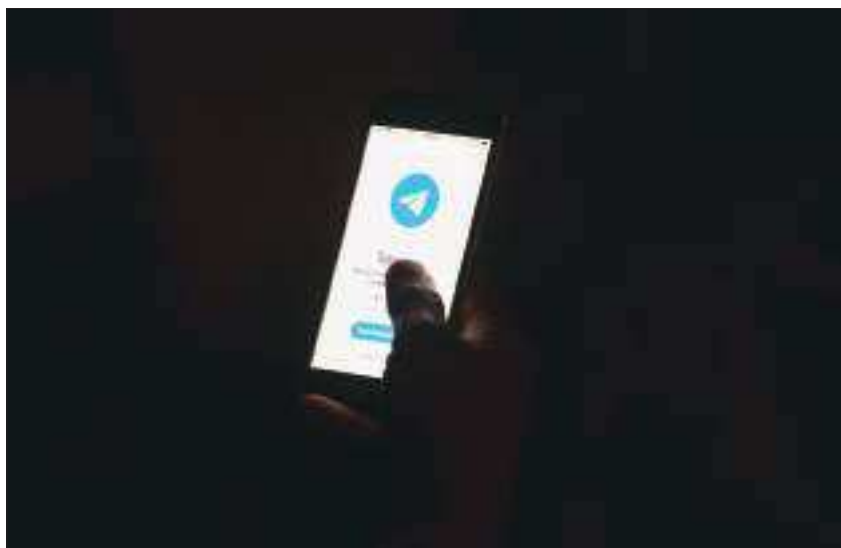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이 중심인 자본주의 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돈벌이를 하거나 뒤틀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끔찍한 개인들을 양산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시장을 형성해 희생양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번 ‘N번방’ 범죄에서도 온갖 더러운 수단이 이용됐다.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평판과 인간관계, 심지어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이 동원됐다. 게다가 이들에게 협박·강제에 의한 성 착취물 제작은 일반 포르노와 달리 별다른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 사회의 뿌리깊은 여성 차별 때문

에 여성이 이런 성범죄의 손쉬운 대상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흔히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이나 소유물로 취급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들은 서민층 가족, 특히 그 안의 여성에게 양육, 가사 등 노동력 재생산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 탓에 여성에 대한 온갖 차별이 정당화되고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자본주의에서 성 상품화는 광범하게 벌어진다. 여성의 몸과 성행위 자체가 인격과 분리된 물건처럼 사고 팔릴 뿐 아니라, 여성의 섹시한 이미지가 상품 판매에 널리 이용된다. 이런 성 상품화



에서 어린 아이들조차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 걸그룹 멤버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섹시 댄스를 추게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남성이 성욕을 과시하고 여성의 신체를 더 모욕적으로 취급하는 게 마치 우월한 남성성이라

▶ 11면으로 이어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이현주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1일부터)가 코앞에 닥쳤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 9000명 중 절반가량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간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노무조항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래서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등이 있어도 감내해야만 했다. 뻔뻔스럽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 때마다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해 왔다. 그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다 이번에는 마침내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은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협상을 한다며 미군의 무급휴직 조처에 항의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전국 주한미군기지 앞 출근 시간 1인 시위를 진행 중이고, 3월 31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전국 조합원이 모이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또,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3월



한국 정부가 책임져라 3월 2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기자회견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이 사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강제 무급휴직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등 즉각적 대책을 내놓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문재인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4월 1일 무급휴직이 단행되면 정부가 이 노동자들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

을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 노동자들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이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지지하기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전에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계급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인데도,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24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한국 측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하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과 별개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정작 이 노동자들을 책임질 의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미국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 앞으로 고용 불안이 반복되지 않게끔 대책을 내놓으라고도 요

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이들의 고용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국방장관 정경두는 <디펜스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토지·건물 무상공여, 카투사 병력 지원, 연합연습·훈련, 방산협력 등 매년 약 70억 불(약 8조 6000억 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고 말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주한미군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조건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 10면에서 이어짐

도 되는 양 여기는 뒤통수 성의식도 부추겨진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시장경제의 확장은 경쟁과 개인주의·파편화 경향을 강화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극히 둔감하고 여성들과 상호 존중하고 교감하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망가진 심리의 이기적인 개인들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의 상당수는 직접 현실의 여성을 상대하지 않고 온

라인 익명성 뒤에 숨어 영상을 훔쳐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일부는 어느 순간 범죄라는 인식조차 사라지고 점점 더 자극적인 대상에 집착하게 되는 듯하다.

이 끔찍한 현실의 이면에는 하층계급 여성들이 처한 빈곤 문제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가난한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나 벗은 이미지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도록 내몬다.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고액 알바’를 제공한다는 미끼에 빈

어가 성 착취물의 희생양이 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이런 사기와 협박에 취약하게 만든 건 이들이 처한 처참한 빈곤이나 가족관계의 파괴였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소외의 영향을 받음에도 대다수 남성들은 성 착취물 제작·유통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상적 남성문화’와 ‘강간문화’를 보여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또, 적잖은 여성도) 일반 포르노를 볼지는 몰라도, 스니프 필름(실제 강간, 폭력, 살

인 등을 찍은 영상)을 즐기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남성은 비교적 소수이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짓이 역겹다고 여길 것이다. 소라넷 운영자 중 여성이 있었던 데서 보듯, 극소수이지만 여성도 돈벌이를 위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에 가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N번방’ 사태의 책임을 모든 남성에게 돌리는 것은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을 끝낼 효과적인 전략과 연결되기 어렵다. 성범죄의 근원은 남성의 생물학적 본성과 거스를 수

없는 욕망 탓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성 해방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성 착취물 제작·유통·판매는 자본주의 체제의 악성 종양과도 같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이 심화돼야 한다. 여성들이 끔찍한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우자.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들의 실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며 여성이 성적 물건 취급받는 현실을 바꿔 나가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09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강동훈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달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에도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 임금이 이미 33퍼센트 이상 줄었는데 말이다.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아예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에어서울,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에서는 노동자의 50~90퍼센트가 무급휴직 중이다.

항공업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타격은 더욱 크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 등의 하청업체들은 무급휴직을 실시할 뿐 아니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곳도 생겼다.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의 리무진 운전은 담당하는 도급업체 '서빅'은 일부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병원 파견 간병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 등도 제대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 악화는 단지 여행업이나 관광운송업 등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던 2월에도 무급휴직 등이 늘고 있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미 2월달에도 일시 휴직자가 61만 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만 2000명(29.8퍼센트) 늘어 1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7000명(33.8퍼센트)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실업급여도 총 78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0억 원(32퍼센트)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해고와 무급휴직 등은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3월부터 더욱 급증할 것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3월 첫 주에 해고 관련 제보가 21건이었는데 셋째 주에는 6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항공·여행뿐 아니라, 학원, 병원·복지시설, 판매, 숙박음식점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장갑질' 제보가 늘었다고 한다.

친기업 정책

이처럼 고용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해고를 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4~6월 동안 휴업수당의 90퍼센트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멍이 많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영세 사업장 소속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120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 고용주가 자신이 내놓아야 하는 휴업수당 지급분도 부담된다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기업 지원은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긴급자금 100조 원 투입을 결정했



3월 19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 노동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다. 지난주보다 지원금을 50조 원이나 늘렸고, 지원 대상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직접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산 위기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삶이 위태로워진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민주노총 등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말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업은 정부 탓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줄 책임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니 기업들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받을 리 만무하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친기업에 맞춰 있다 보니, 경총은 '쉬운 해고'와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근혜 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노동 개악들을 이참에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한 것이다.(관련 기사 5면을 보시오.)

최근 '쉬운 해고'와 법인세·상속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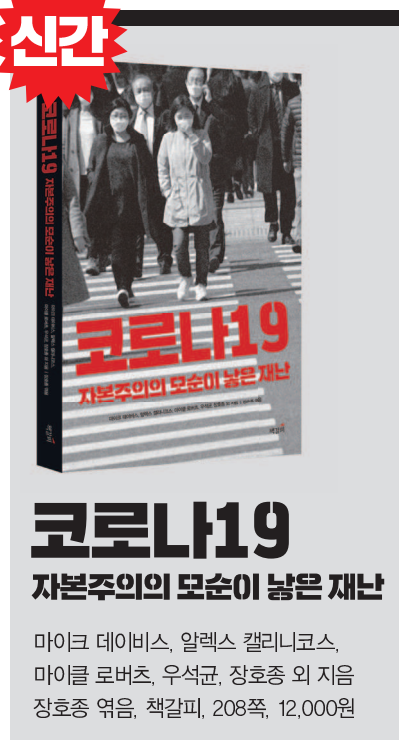
인하 등을 촉구한 경총은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쉬운 해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보면, 이들이 말하는 '고통 분담'의 실체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며칠 전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월급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는 점을 이제는 상당수 노동자들도 안다. 1998년 IMF 위기 때에도 '국난 극복' 운운하며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입법화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기획재정부 관계자 입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

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고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서 노동자들의 위기 극복 대책을 강제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신간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지음
장호중 엮음, 책갈피, 208쪽, 12,000원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제안)

2020년 3월 26일, 노동자연대

-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휴교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라.
- ⑥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공공시설 거주자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 ⑦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라.
- ⑧ 정부가 재난생계소득 100만 원을 즉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라.
- ⑨ 노숙인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라.
- ⑩ 특정 집단 등에 대한 속죄양 상기를 중단하라.
- ⑪ 집회 금지 조치 등 정치적 억압 반대한다.
- ⑫ 상가와 주택 월세 납부 및 부채 상환을 유예하라.
- ⑬ 노동조합은 정부가 이런 요구를 채택하도록 광범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